

정당지지도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정상희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정당지지도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차이를 보임.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새누리당 지지도는 41.6%,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는 24.8%로 정당지지도에는 차이가 나고 있지만, 정당지지도에 관계없이 임대료 등의 비용부담 문제를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대형마트 규제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음.

이는 두 정당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여당이 조금 더 잘 반영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일정부분 작용한 결과로 추측됨.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의제발굴 및 선점을 바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해당 집단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을지로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현장 밀착형 생활정치 강화와 함께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다양한 소통채널과 네트워크의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함

I. 검토배경

□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함¹⁾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기존의 조사와는 몇가지 차별점을 지님

- 기존에 실시된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²⁾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반면 이번 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임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에 관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지지하는 정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비교분석을 할 수 있음

○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지지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계층에서 우리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유추함과 동시에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 대해서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오차는 $\pm 3.1\%P$ 임

2) 해당 여론조사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해당 직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음

II. 정당지지도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설문결과

□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37.7%, 새정치민주연합 19.7%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36.2%임

○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새누리당 지지도는 41.6%,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는 24.8%로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남

<표 1> 직업별 지지정당

(단위 : 명, %)

	지지정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지지정당없음
자영업(240)	41.6%	24.8%	1.7%	1.7%	30.3%
기타(760)	36.5%	18.1%	3.8%	3.4%	38.1%
전체(1,000)	37.7%	19.7%	3.3%	3.0%	36.2%

주:1) 기타는 사무/관리직, 전문직, 생산/서비스직, 전업주부, 농/수/축/임업, 학생, 기타/무직임.

2) ()는 표본수임

□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악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임대료 등의 비용부담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줌³⁾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자영업자 모두 임대료 등 비용부담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대기업 사업확장(31.0%), 자영업 경쟁심화(30.0%) 그리고 임대료 등 비용부담(32.0%)에 비슷한 비중으로 응답하고 있어 경영악화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자영업자는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임대료 등 비용부담(44.1%) 적인 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
- 이번 10월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 자료⁴⁾에서 상가임차인의 평균 월세가 298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료를 포함한 비용적인 부분이 자영업 경영⁵⁾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음

<표 2>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악화 이유

(단위 : 명, %)

	지지정당					전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지지정당없음	
대기업 사업확장	31.0%	30.5%	50.0%	20.0%	26.0%	29.5%
자영업 경쟁심화	30.0%	23.7%	50.0%	.0%	32.9%	29.0%
임대료 등 비용부담	32.0%	44.1%	.0%	80.0%	38.4%	37.3%
잘모름	7.0%	1.7%	.0%	.0%	2.7%	4.1%
전체	100.0%(100)	100.0%(59)	100.0%(4)	100.0%(5)	100.0%(73)	100.0%(241)

3) 이후 분석은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상가임차인의 의견 결과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2014.10

5) 해당 조사에서 소득과 관련한 문항이 빠져서 소득수준에 따른 자영업 경영악화 이유를 파악할 수 없지만 201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의 월 평균 매출액이 877만원이며, 영업이익이 187만원인 점을 감안할 경우 임차료가 비용적인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대략 유추할 수 있을 것임.

- 경영악화의 원인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정책에서도 비용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악화 이유와 일관되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비용부담 축소로 나타났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자영업자들이 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각각 지지하는 자영업자 모두 비용부담 완화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해당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볼 수 있음

<표 3>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지지정당					전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지지정당없음	
사업영역 보호	29.3%	30.5%	50.0%	40.0%	23.3%	28.3%
비용부담 축소	34.3%	50.8%	0.0%	60.0%	46.6%	42.1%
자금지원 강화	28.3%	15.3%	25.0%	0.0%	24.7%	23.3%
잘모름	8.1%	3.4%	25.0%	0.0%	5.5%	6.3%
전체	100.0%(99)	100.0%(59)	100.0%(4)	100.0%(5)	100.0%(73)	100.0%(241)

□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한 대형마트 관련 규제는 지지하는 정당에 관계없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거의 차이가 없지만 새누리당 지지층 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판매품목 제한 등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규제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 규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지층은 69.7%가 찬성한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71.2%가 찬성하고 있어 비중 차이는 거의 없지만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호·유지 보다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및 판매품목 제한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4> 대형마트 규제관련 정책

(단위 : %)

	지지정당					전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지지정당없음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 규제 필요	69.7%	71.2%	75.0%	100.0%	88.9%	76.5%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보호유지	77.8%	71.7%	75.0%	100.0%	87.5%	79.5%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화 및 적당	82.8%	91.7%	100.0%	100.0%	88.7%	87.4%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찬성	58.0%	59.3%	50.0%	50.0%	79.2%	64.4%

Ⅲ. 소상공인·자영업자 설문조사 평가 및 대안

□ 정당 지지도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는 차이가 나지 않음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차별화 및 정책선점이 필요함

- 정당 지지도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의 우선순위가 일치한다는 점은 각 정당에서 입안한 정책사이에서 차별화를 느낄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함
 - 앞서 언급한 자영업자 사이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 격차는 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중 하나로 예상할 수 있음⁶⁾
 - 따라서 어떤 정당이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 입안을 통하여 우위를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함
 - 특히, 지지 정당이 있는 자영업자 집단의 지지도가 확고하다는 가정을 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법률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⁷⁾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선점을 통해 30% 수준의 무당층 지지를 확보해야 함
- 임대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일차적으로 임대료 등 비용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은 재계약시 9%로 제한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인상률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88.6%)인 것으로 나타나 임대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48.3%만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 해당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본 사례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기 쉽도록 풀어서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임

□ 을지로위원회의 역할 강화

- 18대 대선 평가보고서에서 대선 패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역 주민의 삶과 결합하지 못한 생활정치의 부재를 지적하였는데 따라서 현재 활동중인 을지로 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
 - 을지로위원회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을’들과의 지속적인 연대로 현장중심의 활동을 통해 향후 당의 생활정치 활동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하지만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성과 상당수가 불공정 거래, 하도급 문제 등 ‘갑’과 ‘을’사이에 나타난 개별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따라 가계부채 문제, 소비자 피해 문제 등 다수의 국민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음
 - 따라서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이 개별사안 해결을 한축으로 하고 다른 한축으로는 국민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함

6) 이는 두 정당 모두 자영업자 정책에 대해서 차별성을 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집권여당이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7)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2013.4월 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까지 계류중임

□ 소통창구의 다양화와 활동성과의 지속적인 홍보 및 피드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중앙당 차원을 벗어나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활동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원활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이 필요
 -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제대로 된 설명 및 홍보⁸⁾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함에 따라 서민정치는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일삼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함
 -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민생관련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없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홍보로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함
 -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이 실생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지속적인 의제발굴 및 선점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8) 이해하기 쉽고 제대로 된 설명이 중요한점은 지난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문재인 후보의 “기초노령 연금 2배 인상”, 박근혜 후보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을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임